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0. 11. 5

- 현재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다면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 3.0%)에 0.1~0.3%p 상향 요인으로 판단
 - (직접효과) 재정지출 확대로 2021년 미국 GDP가 개선되고 전세계 교역물량도 늘어나 한국 GDP 성장률이 0.1%p 내외 높아질 것으로 추정
 - (간접효과)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GDP 성장률이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제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예: 국경간 이동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를 도출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평가
- 주요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상승, 원화 절상, 주가 강세 등 금융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
- 중장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2%p 내외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예: CPTPP 가입)하고 신재생·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기업들(특히 반도체)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긴급

작성자: 허문종 연구위원(2173-0568), 김진희 선임연구원(0585), 박수빈 조사원(0556)

책임자: 권영선 경제·글로벌연구실장(2173-0569)



목 차



I. 미국 선거(대통령·의회) 결과	1
II.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 전망	2
III.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1. 실물경제	3
2. 금융시장	6
IV. 종합평가와 시사점	8
[붙임 1] 바이든 후보 이력	10
[붙임 2] 바이든·트럼프 주요 공약 비교	11
[붙임 3]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추진 전망	12

I. 미국 선거(대통령 · 의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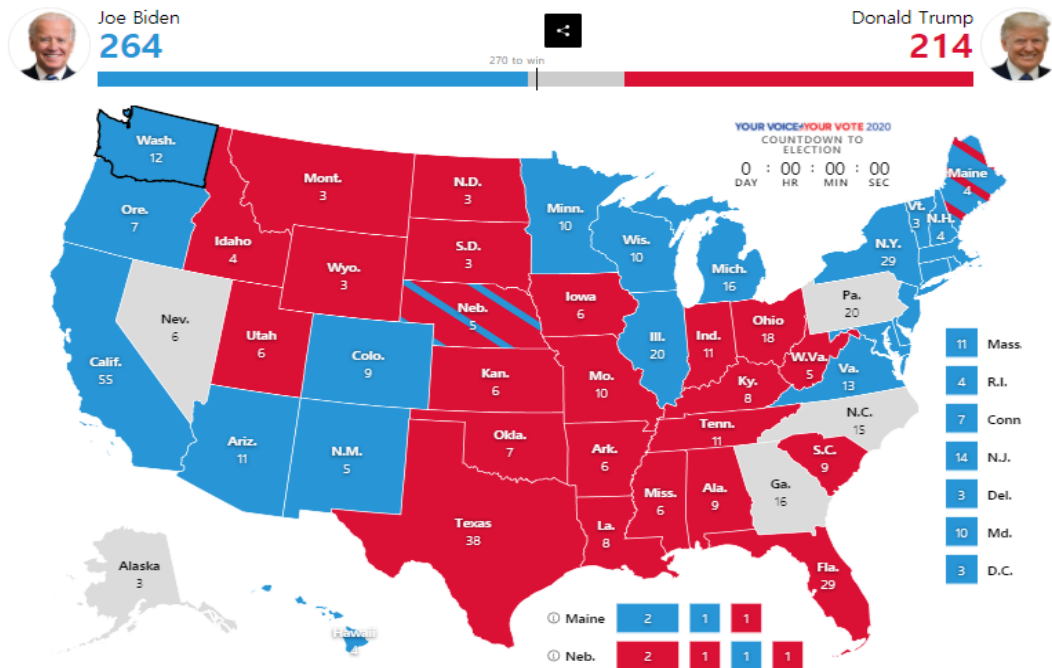
■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11.5일 오전 9시 현재(한국 시간)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네바다주(선거인단 6명)에서도 앞서고 있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
 - 다만 트럼프 캠프 측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에 나섰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12월 중순에야 결정될 가능성도 상존
 - *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싸고 37일 후 승패가 확정

■ 하원은 민주당이 계속 장악하였으나, 상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

-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48석, 민주당 47석을 각각 확보(5석은 개표 중)

미국 대선 개표 결과(50개 주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



주: 한국 시간 11.5일 오전 9시 현재
자료: ABC New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 전망

* 구체적인 공약과 세부 정책추진 전망은 붙임 2, 3을 참조

1. 대내 정책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 (“Build Back Better”)

- 코로나 검진 확대, 휴직급여 연장, 방역물품 생산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국제공조 강화(예: 세계보건안보팀 부활, WHO 재가입)
- 재정지출 확대(예: 인프라 투자), 증세와 규제 강화(예: 법인세 인상, 대형 IT 플랫폼 기업에 반독점규제), 복지 확대(예: 오바마케어 확대, 최저임금 인상)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중산층 삶의 질을 개선

2. 대외 정책

■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Restore America Leadership”)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주요 국제기구·협약에 재가입하기로 공약
 -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란핵합의(JCPOA),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중거리핵전력조약, 파리기후변화협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
- 주한 미군 철수·감축이나 방위비 대폭 인상 없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입장
-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재현될 전망
- 중국과의 통상 문제는 관세부과나 수출통제보다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연계하여 외교적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WTO 체제를 지지하고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III.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실물경제

1) 단기 영향: 2021년 한국 GDP 성장률 0.1%p~0.3%p 상향 요인

■ (직접효과)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2021년 미국 GDP가 개선되고 전세계 교역물량도 늘어나 한국 GDP 성장률에 0.1%p 내외 상승 요인

- 주요 예측기관들은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2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실현되면, 트럼프 재집권에 비해 2021년 미국 GDP 성장률이 1.2%p 내외 높아지고 전세계 교역물량도 0.4%p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측

*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물량 1% 상승은 국내 GDP를 0.26% 높이는 것으로 추정. 이를 대입하면 바이든 승리에 따른 전세계 교역량 상승(0.4%p)*국내 GDP 효과 계수(0.26%) = 국내 GDP 개선(0.10%p)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에 따른 2021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 차이

예측기관	Citi	골드만삭스	Oxford Economics	Moody's	단순평균
바이든 — 트럼프	0.6%p	0.2%p	2.1%p	1.9%p	1.2%p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간접효과)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GDP 성장률이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즉각 철폐·인하하지는 않겠으나,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전망

-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던 2019년 한국의 수출 감소폭(-10.4%)이 전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 가장 컸던 만큼, 앞으로 글로벌 교역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면 한국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평가

*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고도로 통합되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음. 2019년 대중국 수출의존도(%): 한국 25.1, 일본 19.1, 독일 7.2, 프랑스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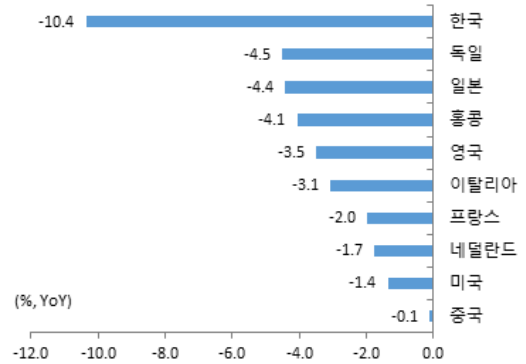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2019년 국내 GDP 성장률 하락폭(0.4%p)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0.2%p)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0.2%p)으로 구분하여 추정

글로벌 교역물량지수 증가율



자료: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9년 교역 상위10개국 수출감소율



자료: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예: 국경간 이동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를 이끌어 낸다면, 서비스업(예: 항공, 숙박)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평가

- 바이든이 국경간 이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가 공약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 현재 일부 국가들(예: 호주-뉴질랜드, 홍콩-싱가폴)이 인접국간 이동제한을 완화하는 조치(Travel Bubble)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 차원에서 국경간 이동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부재한 상황

2) 중장기 영향

① 한국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 잠재성장률 최대 0.2%p 개선 기대

■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경우 교역 여건 개선(한국 잠재 GDP +0.1%p)

- 바이든은 CPTPP* 참여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미국내 산업 발전과 중산층의 이익 증대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

-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전세계 GDP의 13%, 세계무역의 15% 차지)이 참여한 무역협정. 당초 미국이 포함된 TPP(12개국)를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하고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3월 11개국이 CPTPP에 공식 서명
- 미국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글로벌 GDP의 40%, 교역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되어 국내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 영향(예: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기대
 -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비중이 커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수출에 기회 요인인 반면,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와 대일무역적자 심화 가능성은 부정적
 - * KDI(2020년)¹⁾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CPTPP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 한국무역상무학회(2019) 논문²⁾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CPTPP에 추가 가입할 경우 한국 GDP가 최대 1.6%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 한국통상정보학회(2019) 논문³⁾에 따르면 CPTPP에 가입시 한국의 교역증대효과를 10%로 추정

■ 한국이 친환경·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국 잠재 GDP +0.1%p)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필두로 친환경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바이든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과 상당 부분 일치
 - * 한국 정부는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
 - * Citi Bank는 Oxford Economics 모델을 적용하여 친환경 정책이 글로벌 GDP를 항구적으로 0.1%p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

② 한국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마찰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국 잠재성장률 최대 0.3%p 하락 추정

■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공급망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특히 중간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한국 잠재 GDP -0.2%p)

1) KDI(송영관),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2020년 1월
 2) 한국무역상무학회(송백훈), “CPTPP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 연구: 무역실무적 관점에서”, 2019년 12월
 3) 한국통상정보학회(강보경), “한국의 CPTPP가입으로 회원국간 유발되는 교역효과분석”, 2019년 6월

- 미·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또는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쌍순환(Dual Circul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국산화될수록 對中 중간재 수출국(예: 한국, 일본, 독일)에 부정적 영향
 -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인수한 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사이버 기술 탈취가 있을 경우 해당 중국기업의 미국시장과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조치 등을 취할 전망
 - * 쌍순환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예: 미중 무역 갈등)에 대응하여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방점을 두고 국내(내수)와 국제(수출) 양방향 순환이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예: 제조업 핵심 장비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한국 잠재 GDP -0.1%p)

-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0위(2017년 배출량 709백만톤으로 1990년 293백만톤 대비 두 배 이상 증가)로 국제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2019년)에서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순위(전체 61위 중 58위)
-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 수입쿼터 등 무역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
 - *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2. 금융시장

1) 금리

■ 2021년 한국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와 연동하여 상승할 전망

-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부양책(2.2조 달러)과 인프라 관련 재정지출(국채발행) 확대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미 국채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 * 바이든 공약에 필요한 재정지출규모는 2021~24년 중 3.9조 달러 규모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분은 1.4조 달러에 그쳐 향후 4년간 재정적자 규모는 2.5조 달러로 추산
- 한국도 2021년 확장적 예산에 따른 국채물량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미 국채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국고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가중

* 한·미 국채(10년) 금리간 상관계수(일간): 2015~2020년 0.786

2) 환율

■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약세와 중국 경제 성장 가속화로 달러화 약세가 심화되어 2021년 원달러 환율은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가 인상(21% → 28%)되면 미국 대기업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미국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축소될 가능성(달러화 가치 하락 요인)
 -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국의 경제 성장, 금융시장 개방(예: 국채 WGBI 편입)에 힘입어 위안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와의 동조성이 높은 원화도 수출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절상 압력이 점증할 전망
 -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견되는 “전략적 인내”에 대응하여 북한이 도발(예: 미사일·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어 원달러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 위안화/원화간 상관계수(일간): 2015~2020년 0.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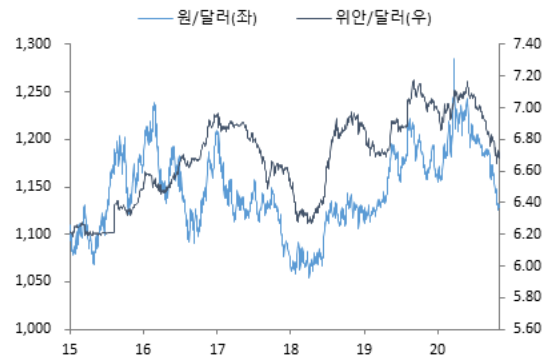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주: 한미 국채(10년) 금리간 상관계수
2015.1월~2020.10월 0.786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원/달러와 위안/달러 환율



주: 위안화/원화간 상관계수 2015.1월~2020.10월
0.578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추가

■ 교역 물량 증대, 국내경기회복, 시장금리 상승에 힘입어 수출·금융주를 중심으로 2021년 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일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장벽 완화,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글로벌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국내 수출에 긍정적
 - * 수출증가율과 KOSPI변동률간 상관계수(월간): 2015~2020년 0.490
- 달러화 약세 기조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증시유입을 촉진
- 경기회복, 시중금리 상승, 원화 강세는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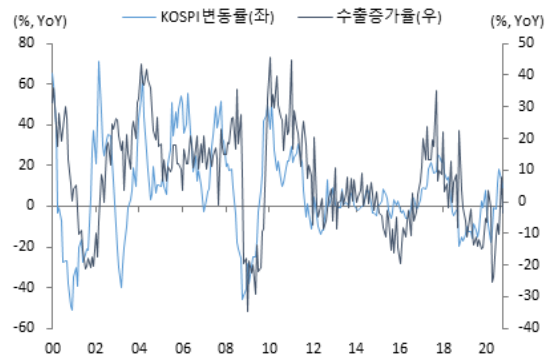
KOSPI와 S&P500 주가지수



주: 한·미 주가지수간 상관계수
2015.1월~2020.10월 0.461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OSPI변동률과 수출증가율



주: KOSPI변동률과 수출증가율간 상관계수
2015.1월~2020.10월 0.490

자료: CEIC,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V. 종합평가와 시사점

-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 3.0%)에 0.1~0.3%p 상향 요인으로 판단
 -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예: 국경간 이동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를 도출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
- 주요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 금리 상승, 원화 절상, 주가 강세 등 금융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

-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예: CPTPP 가입)하고 신재생·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기업들(특히 반도체)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

붙임1 | **바이든 후보 이력**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이력

구분	내용
출신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출생, 아일랜드계 로마 가톨릭 집안, 10세 때 델라웨어주로 이주하여 성장
학력	델라웨어 대학(사학, 정치학), 시러큐스 대학(로스쿨)
가족관계	-첫 번째 아내(네일리아 헌터)와 1녀, 2남, 두 번째 아내(질 바이든)과 1녀 -1972년 교통사고로 첫 번째 부인과 장녀를 잃은 바이든은 의원직 포기를 선언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나, 동정 여론과 의회·대통령의 지지로 이를 딛고 아들들이 입원중인 병실에서 의원 취임 선서를 진행(1973년), 이후 부통령 당선(2009년) 전까지 두 아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 델라웨어주에서 워싱턴 DC(편도 90분 가량)를 출퇴근할 정도로 가정적 비극적인 가족사에도 고통을 친근감과 공감 능력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평가(2012년 총기 참사 당시 전화로 유족을 1시간 이상 위로한 일화가 유명)
	장남 보 바이든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무장관 역임,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
	차남 헌터 바이든은 변호사로, 과거 아버지 조 바이든과의 이해충돌문제, 코카인 양성반응, 형수와 의 연애, 사생활 동영상, 중국과의 커넥션 등으로 논란
정치경력	1970년, 뉴캐슬 카운티(군) 하원의원
	1972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당선(최연소 상원의원) 1973-2009년 동안 7선,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역임
	1987-1995년, 미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
	2007-2009년, 미 상원 외교 위원회 의장
	1988,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 출마, 패배
	2009-2017년 제 47대(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역임
	정치 입문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

자료: 언론 취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2

바이든·트럼프 주요 공약 비교

바이든과 트럼프 주요 공약 비교

	바이든 공약	트럼프 공약
조세정책	-법인세율 21%→28%로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39.6%로 인상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 이익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	-법인세율 21%로 유지 -일 자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Made in America" 세금 공제
경제 및 기업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시행 -은행 자본요건 강화	-규제 완화 -세금 감소
인프라투자	-2조 달러의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펀드 조성 -클린에너지, 공중보건, 통신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4년간 2조 달러 투입으로 일자리 확대 -5G 무선광대역 확장	-미국 SOC 투자 -5G 네트워크 투자
의료보험 및 복지	-오바마케어 확대 -코로나19 방역 확대	-오바마케어 폐지 -경쟁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	해외 자회사 최저 소득세율 인상(10.5%→21%) 미국 노동자 제품에 대한 연방지출 4천억 달러 확대	-미국 일 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
환경	-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 확대 및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전기차 충전소 투자 -환경 관련 협정과 조약 재가입	-환경 관련 협정 탈퇴 -세일과 같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메탄 폐기물 방지 규정 대부분 폐지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시간당\$15)	-최저임금 유지(시간당(\$7.25)) -중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회수
교육	-저소득자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확대 -지역 college 학비 무료 -유치원 시스템 보급	-학교선택제도
무역	-다자기구 회귀 -지적재산권 침해에 강경대응	-각종 다자기구 조약 탈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부과 -태양열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추진 전망

I. 미국 국내 정책

1. 취임 초기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 확대, 코로나 관련 휴직급여 지급,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 생산 확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급, 가계소득 지원(재정지출 2.2조달러 규모)**

- (마스크 의무화) 12월까지 95%의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쓴다면 약 7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모든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주장(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여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
- (검사 및 백신 투자) 드라이브스루 검사대를 2배 늘리고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는 키트와 백신 제조 및 유통(250억 달러)에 투자
- (일관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관된 메뉴얼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정도에 연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
- (공중보건 일자리와 재정) 10만 명의 공중보건 일자리,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검역관 수 확대
- (대내외 공조) 미국 내 팬데믹 검사 위원회(Pandemic Testing Board) 설립,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없앤 국가안보이사회(NSC)내 세계보건안보팀 부활, WHO 재가입 등 국제공조 확대
- (유급병가지원)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개인 및 가족의 건강상 필요에 따라 7일간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12주의 가족·의료 휴가 제공
- (소외지역 기구 지원) 지역개발금융기구(CDFI)와 경제개발관리기구(EDA)에 자금 지원하여 중산층 일자리 창출, 소외지역 자금·시설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2. 재임기간 중(“Build Back Better” 정책)

가. 재정지출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인프라(운송, 통신, 전력, 주택 등) 투자**

- (자동차) 100만 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사용, 2030년 말까지 50만 대의 전기차 충전소 설립, 미국산 신형 버스 무공해화 목표
- (인프라) 4년간 빌딩 400만 채, 주택 200만 채를 높은 효율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개조하고 2030년까지 신규건물 탄소 배출 제로 정책 시행
- (재생 에너지) 2035년까지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없애고 2050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 목표

■ **미국산 제품의 구매와 투자 확대 강조(Buy America)**

- (미국산 활용 확대) 인프라 설립에 미국산 철강 활용 조건을 강화하고 미국내 항구를 통과하는 선박은 미국 선원들이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적 선이어야 한다는 연안무역법(Jones Act.) 강조
- (미국산 필수재 구매) 조달법(Procurement Act)을 활용하여 연방정부에 4천억 달러의 필수재 구매 지시
- (동맹국과 협정 개선) 동맹국과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정 개정, 무역 규제 개선,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필수재 의존도 축소
- (혁신기술 투자 확대) 전기차, 경량 자재개발, 청정 에너지 R&D(1,500억), 공공 건강, 5G, 인공지능, 광역인프라(1,500억) 등에 3천억 달러 투자

■ **미국 제조업 부흥(Made in All of America) 프로그램**

- (미국내 생산 확대) 필수재의 미국내 생산을 보장*하고 정부지원 R&D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생물의약품첨단 연구개발국이 미국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의약품 생산 지원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

- (첨단기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 주도권 확보 노력
- (국외생산 패널티) 미국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징벌적 과세로 10%를 가산하여 최대 30.8%

를 추징하고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10% 세액 공제

- (필수재 공급망 관리) 세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위하여 필수 공급망 검토 (Critical Supply Chain Review)를 4년마다 시행
- (통화정책 공조) FED와 협력하여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중소기업 대출 시설을 설치, 전국의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 제공

나. 증세와 규제 강화

■ 독과점·금융규제 강화

- (반독점규제) 대형 IT기업의 플랫폼 소유주이자 동시에 참여자인 독점적 시장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해 규제 강화
- (투자책임강화) PE(Private Equity) 회사의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책임 및 규제 강화
- (상업은행 규제) 글래스-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을 다시 도입하여 대형 은행의 해체를 통해 은행 건전성악화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
 - * 1993년 제정되고 1999년 폐기된 법안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업종으로의 진출을 금지
- (금융거래세)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 (은행 접근성 강화) 우체국은행과 U.S. Employ Ownership bank 등 국민의 은행 접근성 편의 제공

■ 향후 4년간 1.6조달러 규모 증세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 (해외자회사 이익세율 인상)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의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global intangible low-tax income)
- (장부소득 세금 부과) 미국 기반 기업의 장부 소득에 최소 15% 세금 부과
- (과세대상 확대) 4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자에게 한계 최고 세율(39.6%)을 부여하고 12.4%의 사회보장세 부과
- (부유세 확대) 연 소득 백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 양도세 배당세율에 소득세율 적용하여 최대 세율은 약 두 배가 될 전망(23.8%→43.4%)

- (세금공제 축소) 항목별 세금 공제를 제한하여 고소득자의 공제 가치가 감소

다. 복지 확대를 통한 소득불균형 축소

■ 노동자 권리 강화

- (파업허가) 간헐적 파업을 허가하고 파업으로 인한 해고를 금지
- (고용유지정책) 연방정부 자금으로 해고보다는 고용 유지 장려
- (실업구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해고당한 자들에게 현금지급, 세금공제, 무이자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구제 실시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

- (생애최초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 신용대출 확대 및 최대 15,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
- (저소득 혜택)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및 지역사회 개발블록 보조금에 대한 자금 지원

■ 의료보험정책(Affordable Care Act) 적용 범위 확장, 의약품 가격 인하

-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 보조금의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보험료를 하향 조정 (9.86%→8.5%)
- (의료보험 대상확대) 공공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입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확대
- (고령자 혜택) 근로장려금(EITC)을 고령 근로자로 확대하고 30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은 최소 빈곤 수준의 125% 혜택 수혜
- (의약품) 의약품 인상 제한 및 복제약 공급망 확대를 통한 보급

■ 교육격차 해소

- (학비 감면) 지역 대학(community college)의 등록금을 감면하고 가계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들에게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감면
- (학자금 대출) 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를 유예

- (외국인) 이공계열 박사학위 비자 상한 제거하고 불법체류 아동과 학생에게도 학비 지원금을 지원

바이든 공약관련 예산(추정)

억 \$		2021-2024
총정부지출		39,476
인프라	교통,운송(Transportation)	8,724
	미국 기반 제조("Made in America")	7,000
	재생에너지(Clean energy)	4,728
	기타(Other structures)	2,931
교육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3,669
	초중고 12년과정(K-12)	1,597
	학자금대출(Student loan debt relief)	1,098
사회안전망	아동, 노인 복지(Child and elderly care)	2,565
	사회안정(Social Security)	634
	노동 공급(Labor provisions)	478
연금, 보험	적용대상확대(Coverage expansion)	6,875
	농촌복지(Rural health & opioid crisis)	795
	프로그램피드백(Programmatic feedback)	-1,224
	보험개혁(Health reforms)	-395

자료: Moody's Analytic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미국 대외 정책

1. 미국 리더십 회복("Restore America Leadership"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협정에 재가입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노력**

-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금(UNHCR), 유엔인구기금 등의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란핵합의(JCPOA)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핵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먼저 핵무기 실험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란핵합의(JCPOA),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중거리핵전력조약, 파리기후변화협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

2. 한미·대북관계

- **미국 민주당은 방위비 대폭 인상이나 주한 미군 철수·감축 없이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방위비로 13억 달러(전년대비 50%) 인상을 요구

■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재현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Top-down 방식으로 정상끼리의 만남을 선호한 반면, 바이든은 전문가와 실무진의 협상을 더 중요시하는 Bottom-up 방식을 중시
 - * 2차 TV토론(10.15일)에서 바이든은 북한이 핵 축소에 동의하여야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언급.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8.21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 배로 지칭하였으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
- 전략적 인내 기조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난할 전망

■ 과거 이란 핵 협상때 사용했던 동맹국 외교전략을 북한에도 적용할 가능성

-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은 대북 완화 정책으로 비핵화 협상 카드를 잃었고 국제 동맹의 대북 압박도 약화시켰다고 지적
 - * 2017년 바이든 선거캠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을 외교안보팀 좌장으로,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외교안보 고문으로 임명. 번스 전 차관은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인물로 이란 핵협상 모델을 북핵 문제에 적용 가능
- 오바마 정권 말기에 체결된 이란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은 이란에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개발 프로그램의 단계적 포기를 요구
 - * 이란 핵 협정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과 독일 EU가 이란을 상대로 체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다는 이유로 2018년 협정에서 탈퇴

3. 미·중 관계

■ 바이든은 중국에 관세부과나 수출통제를 통한 제재보다는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무역과 연계하여 외교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전망

- * 바이든 후보는 미·중 무역협정 1단계 이행상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미국 통계기준 33.4%, 중국 통계기준 32.5%)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對중 무역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
- 보호무역기조 유지, 리쇼어링 촉진,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등

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나, 현재의 관세부과와 수입통제는 미국 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

- 중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과 덤핑,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등을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중지시킬 강제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
-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더욱 깊이 관여할 전망
- 중국기업이 인수한 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사이버 기술 탈취가 있을 경우 해당 중국기업의 미국시장과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과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후보의 ‘Buy American Plan’은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세율 인상과 해외일자리 미국 내 이전시 세액공제를 통해 추진
 - * 바이든은 제조업 육성 계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에 되찾아오겠다고 주장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WTO 체제를 지지하고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손상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